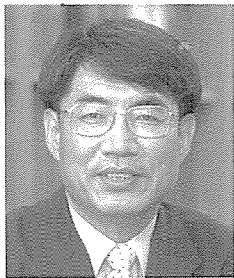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교육문제

# IMF 후 자연계 지원 매년 5만명씩 줄어 교차지원 · BK21 특정대학 특혜 시정해야



李 憲 煥  
(서강대 화학과 교수)

## 대학의 수와 규모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대학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수와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무려 2백여개에 이르게 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비롯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43만명을 넘게 되었고, 여기에 2년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5만명까지 합치면 대학의 입학정원이 자그마치 68만명에 육박한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가 74만명(재수생 19만명 포함)이었으니, 이제 그야말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대학의 변화가 이런 외적인 성장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우리 대학

과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는 해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사회에서 체감하는 대학의 문은 현실과는 반대로 해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대학의 성장속도가 사회의 기대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조건 일류대학만을 지향하는 비합리적인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의 기대 수준을 낮출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의 빠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다.

〈자연계 기피현상〉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수능시험의 자연계 응시자 급감 현상에서 알 수 있다.

1997학년도 수능시험까지는 자연계열이 전체 응시자의 42~4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은 직후인 1999학년도부터 자연계열 응시자가 매년

5만명 이상씩 줄어들어서, 올해는 19만8천명으로 전체의 26.8%에 불과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4년 후인 2006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응시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자연계 학과의 입학 정원이 전체의 53%나 되는 36만명이어서, 자연계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학생이 대학 입학 정원의 55%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의 자연계열 입학 정원만 하더라도 15만명을 넘기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자연계열을 응시한 학생들은 75% 이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현실은 인문계열의 평균 경쟁률이 1.7대 1에 이른 것과 크게 대비된다.

〈교차지원 허용이 원인?〉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자연계 지원자의 감소 현상이 시작되고 4년이 지나도록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정확한 통계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는 통계는 인터넷을 통

하여 그 동안의 신문에서 수집하여 작년 5월20일에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보도된 비공식 자료이다.

교육부에서는 그것이 교차지원 허용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결론짓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자연계 지원 희망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교차지원 허용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여기에 몇몇 교육전문가들이 불충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말아주도록 각 대학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원래 교차지원은 수험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단순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수능시험에서는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월등하게 쉽기 때문에, 인문계열에 응시하여 얻은 성적으로 자연계열을 응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못 도입된 불합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학 합격이 최우선 과제인 수험생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교차지원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런 편법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마련해준 정부와 그것을 수용한 대학에 있다.

교차지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 학생의 비율, 실제로 교차지원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와 구성, 그리고 교차지원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의 수와 구성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정부만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몇몇 교육전문가들이 학생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엉성한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까지 하게 된다.

〈교차지원 허용은 필요악〉 교차지원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중하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는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교차지원 허용을 자제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은 중하위권 대학에게 학생 확보를 포기하라는 주문과도 같은 뜻이 된다.

물론 원칙대로 교차지원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중하위권 대학의 합격을 위하여 자연계열에 응시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만에 무려 43%가 줄어들어 버린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권 대학에게 충분한 수의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확한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는 교육부의 교차지원 금지 권유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상위권 대학에는 영향 없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도 교

차지원 허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한 의과대학 입학을 위하여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얼마나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실제로 교차지원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대략적인 분석은 가능하다.

우선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차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는 의예과와 치의예과에 한정된다. 역시 인기가 높은 한의예과의 경우에는 학과의 성격이 분명하게 자연계열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의예과 학과들이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광대를 제외한 모든 치의예과가 교차지원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의 의예과들도 역시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의예과와 치의예과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매우 작은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수는 많아도 입학 정원이 1천1백명을 밑도는 정도이다. 따라서 인문계열에 응시하여 의예과나 치의예과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의 규모는

전체 응시자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따라서 교차지원을 통하여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하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교차지원 허용을 자제시켰다는 교육부의 대책은 중하위권 대학에게는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계 감소는 심각한 현상〉** 지난 4년간 계속된 자연계열 응시자 감소 현상은 교차지원 허용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던 이공계 출신의 기성세대들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아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공학계 출신들이 더욱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대 진학 희망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퇴출의 위협이 없는 의대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대학의 입학 정원은 국가의 인력양성 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왔다. 따라서 이공계 학과의 입학 정원은 기술경쟁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현장에서 일하게 된 필수 인력의 규모라고 보아야만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정원 관리가 아무 근거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국가의 발전 전략과 상반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공계 대학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력양성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 대학원 교육도 학부모만큼 문제 많아

〈대학가의 '네 탓' 풍조〉 우리 대학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현상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모든 잘못을 '네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다.

작년 말에 6명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구성되었다는 '블루 리본 패널'이 서울대의 교수와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연구와 공부를 소홀히 해왔고, 서울대 학생의 87%가 서울대의 교육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세계 수준에서 20년이나 뒤떨어진 서울대는 미국의 중하위권 주립대학 정도의 수준이라고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서울대 교수들은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하였다. 이보다 앞서 작년 봄에는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낮아서 정상적인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서울대의 보도가 있었다. 서울대 학생의 학부모도 조용하지는 않다. 학부모의 57%가 서울대의 교육이 '부실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회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교수와 학생을 탓하고, 교수는 학교와 학생을 탓하고, 학부모와 학생도 결코 조용하지는 않은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서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서울대만을 짝사랑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지탄의 대상이 하나 더 더해질 뿐이다.

물론 교육부도 대학과 교수와 학생과 학부모를 탓하는 데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기업은 대졸 취업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1년 이상 재교육시켜야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불평들이다.

대학을 마치 자신들만을 위한 전담 직업훈련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주장이다. 대학에 대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대학 교육에도 간섭해야 한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우리 대학의 위기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네 탓'임을 인정하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네 탓'만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생겨난다. 모두가 자기 몫은 다하고 있는데, 남들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BK21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내의 다른 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서울대도 이제 그 동안의 작은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왜 사회에서 '서울대 폐교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다른 대학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온갖 특혜에 물들어 있다가 사회 전체를 나락으로 몰아넣으며 사라져버린 재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튼튼한 뿌리를 기르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의 뼈저린 실패를 잊고 무리하게 다시 도입한 학부제도 자연계열의 대학 교육에 장애요인이 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제는 전공 교육을 소홀히 하고, 온갖 교양 교육과 영어, 그리고 '고시'에만 매달리도록 만들고 있다. '6T' 이외에는 과학과 기술 분야는 필요없다는 식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정상적인 학부제의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

〈대학원 교육도 위기〉 대학원의 교육도 학부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이공계 대학원이 충분한 학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항공대와 과학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연계열의 대학원이 스스로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결과 '지원 = 합격'이라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자연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대학원의 정원을 확대해 온 결과다. BK 21 등의 특혜를 등에 업은 서울대는 엄청난 장학금과 명성으로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싹쓸이하고 있고, 그 여파로 다른 대학원들도 학생의 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평가도 대학원에 대한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연구 업적에 눈이 멀게 된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가장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직 '연구원'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이 사라져버린 대학원에서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교수의 업적을 위해 희생하기를 자청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연구 지원정책도 대학원 교육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연구 지원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사업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온갖 이름의 새로운 연구 지원사업이 등장하고 있어서 교수들은 새로운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 기획되는 사업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뒤흔들었던 BK 21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부족한 재원을 균등 분배하는 것보

다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지만, 결국은 70년대의 재벌육성정책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연구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이고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한 덕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형 연구지원사업의 선정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며, 연구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정계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대학에서의 연구는 진정한 교육과 과학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이권 확보의 투쟁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 현실이 대학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내 탓을 인정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교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잘못과 모자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공계 출신의 사회적 기여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과학기술입국'이라는 허구의 구호만으로 무한 기술경쟁을 이겨낼 수는 없는 일이다.